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1호

발행일: 2024. 1. 10. (수)

제411회 국회(임시회, 2023. 12. 11. ~ 2024. 1.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
- 나. 자본시장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 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 라.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 마. 한국형 탈피오트 기반 구축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1회 국회(정기회)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12월 20일과 21일, 28일 열린 제1차 ~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 18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1회 국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법률안, (3) 법인의 내부자 지분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1회 국회의 2023년 12월 20일, 21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 ※ 「소득세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의 경우 이미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 ※ 2023년 12월 28일 통과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0)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 의원 등 12인
2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	소관위원회(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1인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1인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등 10인	
1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11		정무위원회(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등 10인
1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등 11인	
1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	
16	기획재정위원회(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0		교육위원회(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3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 등 12인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2인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0인
4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4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10인
4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0인
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 10인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3인
4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4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1인
4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1인
4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등 12인
50	국방위원회(2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5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5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5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김진표 의원 등 21인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등 21인
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
5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5인
5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3인
5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0	소관위원회(건)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등 13인	
6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6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0인	
6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1인	
6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0인	
6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1인	
6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인	
6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등 15인	
6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 의원 등 19인	
6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0		외교통일위원회(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등 11인
7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0인
7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0인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1인	
7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7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등 13인	
7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등 10인	
77	행정안전위원회(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7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8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5인
88	문화체육관광위원회(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90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9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등 11인
9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의원 등 13인
100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 의원 등 10인
10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 등 10인
1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 의원 등 10인
1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0인
10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1인
1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0인
10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4인
1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1인
10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0인
1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0인
11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
1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3인
11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1인
113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양수 의원 등 10인
11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
11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8	보건복지위원회(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
12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1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7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등 11인
13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2인
13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
13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0인	
1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3인	
1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
13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0인
1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
13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등 11인
1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1인
14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2인
1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
1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0인
14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등 13인
1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
1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1인
14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등 11인
148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14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등 10인
150	환경노동위원회(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5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5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5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의원 등 10인
15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1인
15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4인
1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
160	국토교통위원회(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10인
16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7인
1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6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6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17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
17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1인
17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6인
17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 의원 등 15인
17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 의원 등 10인
17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7인
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0인
1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3인
17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1인
180	정치개혁 특별위원회(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8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 자본시장 내부거래 규제 강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한국형 탈피오트 기반 구축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

개요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기술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기존 국내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하여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도 지난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2

역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는 산업계 주도의 인재 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이슈 참고).

2023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p> <p>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육성한 국내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대학 등 기존의 교육체계 외에도,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p>	2023-12-20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과제목표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주요 내용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 투자지원 확대, ▲ 인프라 구축 지원, ▲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 R&D 강화
 -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 레드바이오· 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 인프라 구축*
 -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평가· 인증 등 바이오플라스틱 육성방안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②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자원인프라 정비

- (금융) 혁신성장펀드를 '27년까지 25조원' 조성하여 집중 지원
 - *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5년간 45조원)와 민간매칭(10.5조원) 통해 15조원 규모의 자펀드 추가 결성
 - 정책금융의 신성장 4.0 전략 중점투자를 유도¹⁾ 하고 민간과 공동 금융조달 체계 마련 등 정책금융 지원방식 다변화²⁾
 - 1) 투자 대상기준을 개편하고 신성장 4.0 프로젝트 투자 등에 성과평가 비중 확대
 - 2) (예시) 대출 중심 지원 → 사업특성별로 자본투자 및 메자닌 방식 활용 등
- (인재양성)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발표
 - *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인재양성대책 추가 마련
- (글로벌 협력) 우리 기업의 참여 수요가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 방식 해외진출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험증진자금(EDPF),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등 연계로 프로젝트 적극 발굴·지원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인재양성)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등 추진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5대 첨단 산업(A·B·C·D·E)별 인재양성방안* 지속 마련
 - * ¹⁾반도체(22.7), ²⁾디지털(22.8), ³⁾바이오헬스(23.4), ⁴⁾환경에너지(23.5) 既발표 → ⁵⁾모빌리티, ⁶⁾첨단부품 등 인재양성 방안 마련 추진(23.下)
 -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
 - *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기존 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학위인정 및 야간·파트타임 수업으로 업무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취업·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 * (예) 해외 우수인재 배우자 등의 취업범위 확대 등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7. 12.)

- (혁신 인재)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 바이오·AI·나노 등 판(板) 기술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23.上)
 -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도입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융합인재(업종 지식 + SW 역량) 양성 추진
 - * 업종별 교육 전담기관 지정하여 구직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금년중 상세 구성방안 수립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27), 단기 실무과정 신설(23) 등을 통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 2023. 9.

[김성원 의원안 등: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2023. 11.

[IT 인력 양성 정책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1-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2. 30.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 자산(security assets)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반드시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9. 8.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인력에 대한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와 중장기 인력양성 지원기반 구축 등 산·학·연의 정책 수요를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불투명한 재정 지원 규모 및 인력과잉 공급 우려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 방향과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미흡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자본시장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개요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자거래가 발생하면 정보를 모르는 일반투자자는 손실을 입고, 내부자만 이득을 얻습니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합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규제(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와 사후적 규제(단기매매차익 반환, 사후공시)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를 자본시장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2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회도 최근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7호 금융규제·제도 개선](#) 이슈, [제2022-11호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슈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음.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3조의3 신설 및 제446조).</p>	2023-12-28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과제목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주요 내용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금융위, 2022. 8. 8.)

- ①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2. 9.
이용우 의원안: 주요주주의 대량매도 사전공시 의무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누리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05 2023. 2. 16.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45개 주요국 상장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황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저하며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역시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인이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주요국과 격차는 여전히 현저하다...

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개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인 입법·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새롭게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육 비용 지원 증가(부모급여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씩 지급/첫만남 이용권이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돌봄과 교육 확대(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시행(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설 등)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지원제도 시행(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소득기준을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면제 등)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5호 육아 지원 강화](#) 이슈 및 [제2021-4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이슈 등 참조).

2023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완화 및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 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3-12-21 (원안가결)
2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3		<p>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과제목표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주요 내용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 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 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저출산 대응】

- (출산·육아) 부모급여¹⁾ (23.1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22.1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22.1월~)²⁾ 등 출산 인센티브 강화

1)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지원

-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¹⁾ 하고, 육아휴직기간(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²⁾ 확대

1)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예 : 現 19시 → 改 20시)

2)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22년)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3】인구·기후위기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과학과 합리,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1】저출산·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발굴, 사회적논의 본격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 발굴

▪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 '20.12 발표) 수정·보완(23.下)

* 4대 분야(저출산 대응,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인구 확충) 6대과제 선정

-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및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¹⁾ 추진,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²⁾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1) 양육보육 관련 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저출산 대응 예산사업 정비 등
2) 고령자 계속고용 및 복지제도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②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 **(저출산)** 육아휴직 기간(1→1.5년)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¹⁾ 검토(연구용역),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²⁾ 마련

1) (현행)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 (개선)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 등 포함
2) (예시)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 등

 -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보육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통합형 모델 도입

- **(축소·고령사회)**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23.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제도화, 다양한 시책사업 통해 지역활력 제고 추진

 -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규모화 유도

- **(경쟁인구)**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 마련

 -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4.1만명, 월 평균 1만명 이상 신속입국)하고,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³⁾ 마련(22.12)

* 장기근무 비전문인력의 숙련화 및 구인난 심화 업종(예: 서비스업) 도입검토 등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1 저출산·고령화 대응

◇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

①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

- **(대응방향)** 인구정책 4대 분야¹⁾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²⁾

1)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2) 「고령친화 주거지원대책」(23.3/4), 「농촌소멸 대응방안」(23.4/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23.4/4) 등

- **(추진체계)**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 추진

* 기존 「인구위기대응TF(기재부 주관)」 및 「백세사회정책기획단(복지부·고위 주관)」을 통합

②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 **(이민정책)**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 마련(23.4/4)

* (예)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총량제 도입 검토, 숙련 인력 확대, 지역기반 비자제도 활성화 등

- **(비자제도)** 외국인력 공급관련 쿼터 확대³⁾ 및 비자제도 개선 추진

*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자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검토

 - 지역특화비자⁴⁾는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시행(23.4/4)

* 지자체 추천 외국인 및 지자체내 동포가족 대상으로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동포(F-4) 비자 先발급 <現> 28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획기적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 (정주여건(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 (투자유치(안))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자율적 개발 지원, 신규 법인설립·투자시 혜택 부여 등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참고 자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안 등: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1\)](#) 2023. 11.

[김승원 의원안: 제안경위 등](#) 2022. 11.

[김희재 의원안: 제안경위 등](#) 2022. 11.

[송언석 의원안: 제안경위 등](#) 2022. 11.

[이수진 의원안: 제안경위 등](#) 2022. 11.

[고용진 의원안: 제안경위 등](#) 2022. 11.

[서영교 의원안: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및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2022. 12.

[전재수 의원안: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2023. 4.

[박성준 의원안: 소득세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 완화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2023. 4.

[유경준 의원안: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2023. 4.

[한준호 의원안: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포함](#) 2023. 4.

[김용민 의원안: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2023. 4.

[신동근 의원안: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2023. 11.

[진선미 의원안: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2023. 11.

[정성호 의원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2022. 11.

[정부 제출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등](#) 202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11.

정부 제출안: 제안경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11.

한병도 의원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예산안분석시리즈 VII\]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 미래포럼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누리집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9. 22.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는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개인과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2. 5. 17.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실태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함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23. 4.

본 과업의 목적은 초저출산 사회의 분기점인 2001년 이후 2021년까지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복합적 원인, 저출산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주요국별 사례 분석 및 정책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을 제시함에 있음.

라.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개요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의료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경우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어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등의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공정위, 권익위,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최근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신설 병원과 약국간 리베이트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u>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본 대안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2023-12-28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p>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p> <p>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공급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되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과제목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 내용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120대 국정과제]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과제목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

주요 내용

(규제혁신)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의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 부담을 낮추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사모펀드)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 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
-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 제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 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2023 정부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 2023. 1. 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콘텐츠)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 웹소설 분야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SNS를 통한 부당고객유인 등 적극 감시
 - OTT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 불공정 거래관행 등 점검
 -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 등 감시*
 - *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개정] 문체부 주관, 공정위 협조 [불공정행위 감시] 공정위
 - (여가·건강) 일상회복 이후 수요가 증가한 여가 업종의 불공정행위,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을 집중 점검
 - * [레저용품]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행위, [속박업] 숙박업자 대상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서정숙 의원안 등: 제안이유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유상범 의원안: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누리집

[\(2023년 정책돋보기\)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2. 12. 31.

이 보고서의 목적은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조항 신설이 제약회사와 의료인·의료기관, 약사 간의 불법적 리베이트 감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적발건수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건수의 증감 그리고 기존의 리베이트 비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부분으로 이전(shift) 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약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마. 한국형 탈피오트 기반 구축

개요

탈피오트(Talpiot)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고교졸업자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당시 미래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월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5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9월과 11월에 전형을 진행하여 같은 해 12월 첫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설 당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과는 달리 실제 운용 상황에서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 면에서 모두 탈피오트의 강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방첨단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방위원회	<p><u>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u></p> <p>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옛(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사과정 운영 후 중위로 임관하게 하여 군연구소, 방산업체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복무하며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고 전역 후에는 전공분야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군 복무·취업·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음. 또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는 계급·보직이 없어 국방과학 분야에서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 관련 전문분야와 연계한 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p>	2023-12-28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주요 내용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국방부, 2022. 7. 22.)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軍구조로 개편

- (전략개념) 미래 전장환경 고려,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 (지휘구조) 미래 연합방위, 소 영역 합동작전 등을 고려 지휘구조 재설계
* 합참·각 軍 본부 기능·구조 최적화, 다양한 합동부대 편성 등
- (부대구조) 새로운 작전개념·첨단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
- (전력구조) High-Low Mix 개념 기반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재설계
* 게임체인저, AI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확충
- (병력구조) 간부 비율 증대, 전문인력 확대 등 미래 병력구조 재설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검토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2023. 8.

김진표 의원안: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전역\(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8. 11.

2023년 7월 28일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는 창설 당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하였으나 제도의 설계와 운영 면에서 모두 탈피오트의 강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미래 국방상황을 볼 때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탈피오트와 같은 최고의 인재 선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 국가적 지원을 통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가능성에 중점을 둔 입법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023. 7. 13.

탈피오트(Talpiot) 제도는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첨단 군사과학 인재로 육성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현재의 강국으로 만드는 데 근간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제도이다. 탈피오트 제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우수한 교육과정과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높은 평판으로 볼 수 있다. 탈피오트는 엄격한 선발제도를 통해 20대 초반의 영재를 선발하여 우수한 교육과 특혜를 제공하고, 졸업 시에 탈피온(Talpion)이라는 영예를 준다. 졸업 이후에도 탈피오트 졸업생들은 탈피넷(Talpinet)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적 유대를 통해 서로를 견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개발의 시너지 창출, 나아가 창업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군 현대화는 물론, 국방 과학기술 인재 육성,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을 거두었다.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나 경제환경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성공사례는 우리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제도 수립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2023. 9. 6.

제1세션 | 발제

발제 1: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김도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발제 2: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의 성과와 한계

박영욱 이사장(한국국방기술학회)

제2세션 | 토론: 한국형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제도

좌 장: 이동만 부총장(KAIST)

토 론: 김수광 정책기획관(국방부), 신진교 부소장(국방과학연구소), 손병호 부원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황판석 미래인재정책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한경 안보전문기자(뉴스투데이)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